

쇠고기 수입과 소사육 농가 보상에 대하여 우리도 할말있다

-
- 일시: 1988년 2월22일(월) 오후2시
 - 장소: 본회의회의실
 - 참석자: 강희구(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최준구(광주채란분회장)
강석진(과학축산부시장)
 - 사회: 노영한(본지 편집국장)
 - 정리: 조종수(본지 기자)
-

쇠고기 수입개방한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것 아니다

사회: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기획원측이 이에 대응하는 자세가 양축가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책이 아니고 일시 마약을 주는 식의 보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또 시간을 끌면 끝수록 생산자쪽보다는 소비자쪽에서 여론이 수입은 어쩔 수 없이 개방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개방을 요구해오는 것이 쇠고기·담배·보험 등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99억달러어치의 무역역조현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압력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100억달러어치를 사가라는 것이지 축산물수출이 아닌데도 마치 정부에서 우리 국민한테 홍보할 때는 100억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1,000만불 정도는 양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의 초점을 흐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양축가들에게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한 정부에서는 축산물값이 떨어지면 무제한 수매비축을 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생산기반을 도와주는 쪽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정책적인 대안은 기본적으로 하나도 제시되지 않는 실정에서 무제한 수매비축이라는 것이 사실상 양축가들한테 어떤 보상책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느냐를 생각해보고, 수입개방압

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양축가들의 자세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농축산업 희생위에 공업발전 의미없어

강석진: 수매비축이란 얘기에 앞서서 저는 노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100억불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필이면 농축산물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공산품 팔아먹기 위해서 축산업자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견해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관변경제학자가 비교우위론을 찾는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매일경제신문에 ‘소키우지 말고 공장 가서 일하고 쇠고기 찐것 사다 먹자’는 모 경제학자의 기사가 신문지상에 공공연히 실린 것을 보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농민편에 서는 경제학자 많이 나와야

사회: 2차산업(공업분야)쪽에는 누가 그런얘기를 하면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해서 큰 불이익을 주는데 농업쪽에서는 그런 예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농산물을 수입개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측이 왜 이렇게 거세게 농축산물

“ 그야말로 공산품 팔아먹기 위해서 축산업자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견해입니다. ”



△강석진 부사장

의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하는 전술전략 개발해야

강석진: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위를 거슬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체가 너무 미국한테 약하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 사실 현재 미국의 곡물수출국 중 규모별로 볼때 우리나라가 다섯번째 되는 큰 고객인데 고기까지 사가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봅니다.

담배의 경우 미국 담배값이 일본에서는 1,200원, 유럽쪽에서는 1,0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700원에 팔라는 요구를 서슴치 않는지... 더욱이 이러한 요구를 국내에서는 800원선까지 팔게 되는바 이 점을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보며 우리 역시 이에 대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무릎꿇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경직된 자세에서 유연한 자세로

사회: 우리가 약하게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6공화국에서는 달라지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현안에 있어서 정부의 통상협상 방법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쇠고기수입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정부가 이미 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신뢰성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측에서는 더욱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기 위한 강압적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렇듯 우리정부가 저자세로 협상에 임하거나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지로 몰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조합장님께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기반조성에 지원해야

강희구: 제가 봐서는 너무 확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수입개방압력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관건이라고 볼때 정부적 차원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했지만 우리 생산자 측에서도 또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쌍방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저토록 수입개방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상에서는 도리없는 일이나 농축산업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상이란 얘기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보상이란 호도지책이지 영구지책은 아니거든요. 보상이라고 한다면 일시 손해가 이만큼 났으니 보상해야겠다는 호도지책 가지고서는 축산업이 제대로 지탱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입이 개방됨으로 말미암아 축산업의 기반조성이 약화되어 결국 산업의 한도통이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쌍방에 모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재정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무역흑자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정부차원에서 1차산업을 하는 우리 농민한테는 이렇게 인식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야말로 배합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서 10분지1만 떼어가지고서라도 정부가 축산정책에 환원만 시켜준다고 해도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
정부에서 어느정도
협조체제가 이뤄진다면
양계업자체의 생산품이
수출하는데에 크게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강희구 조합장

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에서 어느정도 협조체제가 이뤄진다면 양계업자체의 생산품이 수출하는데에 크게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매년 홍콩이나 일본에서 달걀과 닭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옵니다. 얼마전에 홍콩에서 우리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도중 약간의 가격차이로 결렬되었는데 정부에서 관세부가세만 환급하여 주더라도 그들이 요구한 가격에 전체물량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제 외국의 개방요구에 대비하여

우리도 뭔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트고 개척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연구를 요망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회: 관세도 당초 7%에서 5%내려서 2%정도로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축가들의 기대였는데 사실상 2%밖에 안내려 양축가들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봅니다. 더욱이 관세 부가세의 환급제도 같은 것이 일반 공산품에서는 모두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간에 현재 농축산업분야도 2차산업정도의 혜택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양축가들의 견해입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축산정책을 보면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오다가 갑자기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생산과 공급을 늘려나다가 어느 정도 케도에 오르면 수요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여 무리없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물 유통개선 급선무

강희구: 우선 급선무가 현실점에서 어떠한 유통개선을 통해야 수입개방을 막아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생산량으로 보나 소비량으로 봐서 계란·닭고기 공히 서울근교지역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을 중심으로한 시설을 설치, 유통개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계란은 우선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6개소로 나누어 산지집하장을 만들어서 수집을 일원화시키고 공급은 도매상인으로 하여금 체인식으로 만들어 공급하도록 하고 대수요처와 군납은 조합에서 직매해야 합니다.

닭고기는 도계장을 중심으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도계장에서 전부 이용계획을 마련, 상품을 만들어서 역시 도매상으로 넘기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수요자와 상인들간에 이런 완벽한 제도적인 체제가 구축된다면 만약 어떤 상인이 수입을 해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일은 축협 중앙회에서 적극 나서서 보완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축산관련 모든 분야가 관심가져야

사회: 협동조합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금바로 해야 될 일이 유통구조 개선사업인 바 이런 것을 정부의 재정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상 진정한 보상이라고 봅니다.

동물약품쪽에서도 축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신경을 안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전에 동물약품유통협의회에서도 동물약품업자들이 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주어 양축가들한테는 상당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약품업체나 사료업체는 사실상 직접 기르는 생산자같이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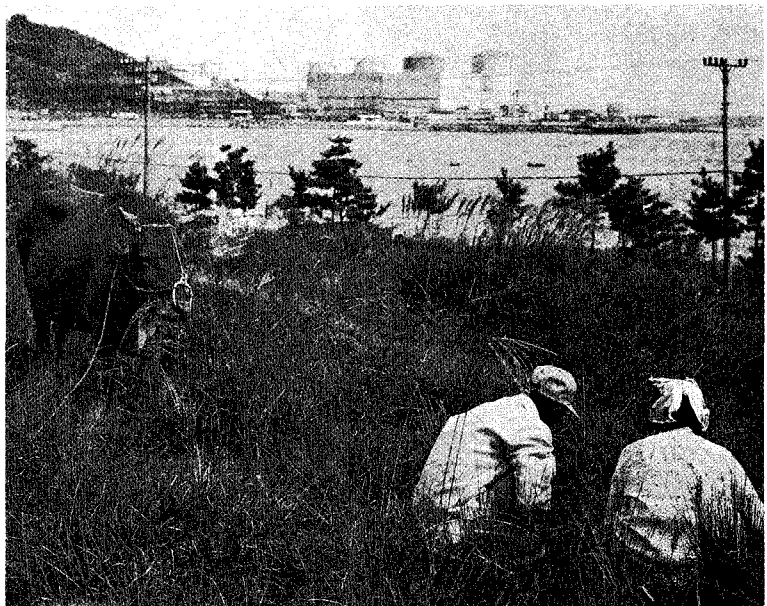
“ 산지집하장을 만들어서 수집을 일원화시키고 공급은 도매상인으로 하여금 체인식으로 만들어 공급하도록 하고 대수요처와 군납은 조합에서 직매해야 합니다. ”

“ 현재 정부에서 통상 협상하는데 테크닉이 부족하다든가 국제정보에 센스가 없다는 것 이전에 정책입안자들이 축산물도 식량이라는 개념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판매량이 줄어들면 양축가보다도 동물약품이나 사료쪽에서 경영의 압박을 더 느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강석진: 직접적으로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표시하고 더욱더 직접적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결국 축산업이 어려워 된다면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관련업체라고 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통상 협상하는데 테크닉이 부족하다든가 국제정보에 센스가 없다는 것 이전에 정책입안자들이 축산물도 식량이라는 개념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외국에서 식품공급을 안해준다고 가정했을 때라도 우리가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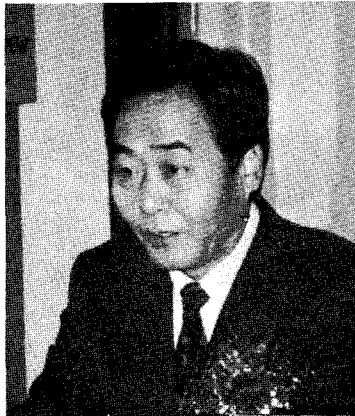


한국의 기본식량은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라도 축산물이 식량임을 정책입안자들이 감안해 주길 바랍니다. 선진공업국들이 1차산업이 육성된 위에서 올라섰다고 보며 또한 1차산업의 기반 위에서 공업국이 돼가지고서도 현재 1차산업을 무시하고 있느냐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도 농산물 수출장려금 등의 국가예산이 없어 이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외국에는 이미 별도로 1차산업육성기금이 국가예산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이 수입개방될 경우 우유·계란·달고기·난분·쇠고기 등의 덤핑물건이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 1차산업 육성기금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생산원가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국가에서 1차산업 육성에 예산을 세워 보조해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강희구: 일본 같은 나라는 농업보조금제도라는 법이 16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을 전체 비율에서 계산해 보면 약 35%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낙농분야가 가장 보조율이 많고 그다음이 양계 그리고 양돈 순으로 돼 있더군요.

사회: 세계적인 경향이 방금 강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식량안보적 차원이 중요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식량안보적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

“
전체적인 현황과 악을 통찰함과 아울러 수입개방압력에 대비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 최준구 분회장

니다. 예를들어 어느 농촌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내부적인 붕괴로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형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도시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농촌지역은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은 현재 도시에서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농촌의 농민문제가 도시로 이전돼서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도시문제가 아닌 농촌문제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외국에서는 농촌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농산물가격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전에 축산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모든 축산인이 연대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여론인바 그런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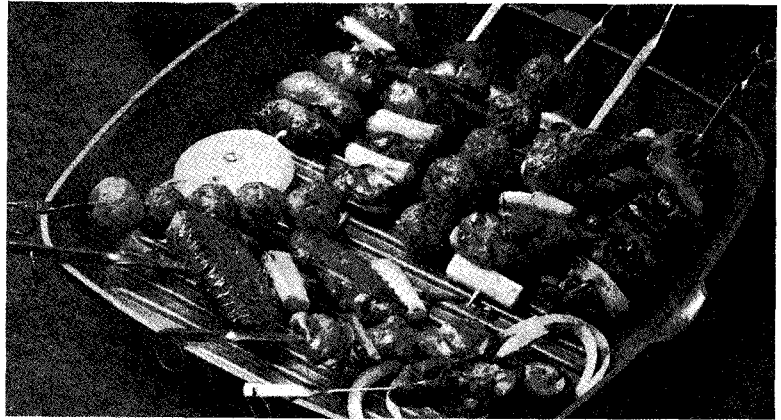


보수적인 농민 단합 어려워

최준구: 양계업자·양돈업자·낙농업자 모두가 단합·단결한다는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어떤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안겨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의 망설이고 참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현재 팽배되어 있는 이기주의의 일종인데 그동안 우리는 양계산업에 있어서 생산 측면이라는 양계분야의 한 단면에만 눈을 뜨고 있었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제적인 현상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지금과 같이 복잡해진 수출·수입관계가 얽힌 것을 모르고 지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양계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현황과 파악을 통찰함과 아울러 수입개방압력에 대비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통상문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농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숨기고 시간을 끌다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여론을 수렴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석진: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수입개방이 될 경우 협상과정이나 유통을 비롯한 축산물 수입량의 정확한 양을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입이억금 차액활용에



대한 명세발표를 통해 이것의 운용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축산물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의 주·부원료와 동물약품 주요생산자재 등의 관세 부가세 철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세율을 인하해주고 장기저리융자 제도에 있어서 일반대출금리는 11.5%인 반면 농수축산대출금리는 14.5%인데 이에 대한 자금의 현실적인 배분이 필요함을 지적, 이의 시정을 바라며 더욱이 1차산업육성기금의 조기정착을 주장합니다.

넷째, 국제경쟁력을 강화키위해 현재 협소한 계사가 밀집된 상태에서 각기 일령이 다른 닭들이 근접하여 발생하기 쉬운 방역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농지에의 축사 시설건축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란의 G·P사업, 도계장의 계열화사업 등의 유통업체를 육성지원해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좋은 식품을 만들게 되어 소비층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며 소비축진이 따르게 된다고 봅니다.

여섯째,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이

이루어지도록 농림수산부의 통제가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공정하고 건전한 노력의 댓가가 되돌아 올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양계인의 자세로는 원료자재의 면세가 될 경우 육계는 태국·브라질을 제외하면 국제경쟁력이 있으니가 방어와 동시에 차원높은 공격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부화장·사료공장·관련업체간에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어 유통마진이 적어짐으로써 가공식품의 개발이 용이해지며 결국 소비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거듭 강조합니다만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국내적으로 산업과 산업간의 이해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해 생산자인 양계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계]**